

세계화, 사회적 자본 그리고 시민성

김 경 래 (Kim, Kyung-rae) *

(E-mail : kimkyungrae@googlemail.com)

논문접수일 : 2010년 4월 26일

논문심사일 : 2010년 4월 28일

게재확정일 : 2010년 5월 17일

* 학위취득대학 : 베를린자유대학
현직: 호남대학교 초빙교수

세계화, 사회적 자본 그리고 시민성*

<국문요약>

냉전이후 국제사회를 특징짓는 세계화는 국가들 간의 상호의존성을 심화시켰다. 이러한 상호의존성은 세계화로 야기된 문제해결에 있어 세계시민사회, 세계시민 민주주의의 필요성에 대한 근거를 제공하였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세계화라는 현상 속에서도 국민국가는 여전히 존재하고 있으며 시민성의 소재지로 불변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이 국제사회에서 국가들 간의 상호의존성의 심화로 야기되는 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의 노력의 필요성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국민국가의 일원이면서 동시에 세계화라는 현실에서 국가의 일원을 넘어 지구촌의 한 시민으로서 살아가고 있는 오늘날 우리들에게 시민성은 개별 민족 국가의 주권에 기반을 두면서도 민족주의로 인한 문제를 최소화하고 또한 세계화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민주적 정치 공동체를 지향하는 새로운 시민성에 대한 모색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이 글은 민족 국가, 국민국가에 기반을 두면서도 국제사회에서 시민들 간의 연대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연대의 시민성을 주장한다.

[주제어] 세계화, 시민성, 세계시민성, 연대의 시민성, 상탈무폐

I. 들어가며

교통과 정보, 통신의 발달은 사람과 자본 그리고 상품이 국경을 초

* 2010년 4월 28일 호남대 인문사회과학연구소 주최, “글로벌시대를 맞이하여 세계시민의식함양을 위한 포럼”에서 발표된 논문을 수정 보완한 논문임.

월해 대규모로 자유로운 이동을 가능케 하였다. 이러한 흐름과 동시에 일국 차원의 결정이 자신의 영토를 넘어 다른 국가에 영향을 미치고, 국제기구에 의한 결정이 국가의 주권에 제한을 가하는 현상 또한 나타나고 있다. 즉 국제사회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현상들은 일국적 차원을 넘는 다양한 세력들의 상호작용의 결과물로 한 국가의 경계 내에서만 다루어질 수 없는 것으로 전통적인 국민국가와 주권의 개념을 깨트리고 국가 간의 경계선을 허물고 있다.

냉전 해체 이후 국제사회의 이러한 특징은 세계화라는 담론으로 표현되고 있다. 세계화로 인해 국제사회에서 국가들 간의 지리적, 공간적 제한은 제거되었으며 각 국가들 간의 상호의존성, 연계성은 심화되었다. 이러한 상호의존성은 제3세계의 외채문제, 수천억 달러에 이르는 국제적 자본의 이동으로 인한 문제, 보건과 질병, 오존층 파괴 등 일국적 차원에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야기하였고 각 국가들 간의 협력을 통한 문제해결을 위한 다양한 노력이 제기되었다.

이러한 노력의 하나가 데이비드 헬드(David Held 1992)가 제시하는 세계시민 민주주의 모델이다. 현실 사회에서 개인들은 물리적 거리만 존재하지 실제 지구상의 어느 누구와도 관계되어 있지 않은 것은 없다는 한 실험 결과는 세계시민사회 그리고 세계시민 민주주의 모델에 의미성을 부여한다.¹⁾ 세계시민사회에 대한 논의는 이미 18세기 임

1) “미국 대학 캠퍼스 내에서는 ‘케빈 베이컨의 6단계’라는 놀이(여섯 다리만 걸치면 인간은 모두 다 아는 사이라는 속설을 반영한 놀이)가 널리 유행했다. 이 놀이의 규칙은 아주 단순하다. 이 배우와 함께 출현한 다른 배우와의 관계를 1단계라고 했을 때, 관심 있는 미국 배우들이 케빈과 몇 단계만에 연결될 수 있는가 하는 가장 빠른 경로를 알아보는 놀이이다. 그런데 놀랍게도 대부분의 미국 배우들이 여섯 단계 이내에 케빈과 연결되었다. 코넬대의 던컨 와츠와 스티브 슬로가츠도 이 점을 증명하여 ‘좁은 세상 그물망(small World Network)’의 동역학이란 이론을 98년 6월 ‘네이처’에 발표하였다. 이들은 미국의 전체 배우 225,226명으로 연결망을 구성하고 각각 61명의 주변 사람들하고만 국소적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가정했다. 그리고는 단지 몇 가닥만이라도 불규칙적으로 가지를 뻗어 연결할 경우 모든 구성원들이 평균 3.65단계에만 연결될 수 있다는

마누엘 칸트(Immanuel Kant)에 의해 제기되었다. 칸트는 이성이 공적으로 사용될 때 세계시민사회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았다. 칸트의 이러한 사상을 재해석하고 발전시켰다고 주장하는 존 롤즈(John Rawls 1999)는 만민의 개념으로 세계시민사회를 설명하고 있다. 또한 데이비드 헬드(David Held 1995)는 범세계적 시민의 출현을 옹호하면서 시민들의 권리가 자신이 속한 국민국가에 의해 침해될 때 그들이 호소할 수 있는 범세계적인 민주주의 입법의 필요성에 대하여 논하였다.

그러나 세계시민이라는 개념에 대해 기본적으로 비판적인 시각 또한 존재한다. 이 비판의 주된 논거는 추상적이고 선언적인 세계시민의 의미에 몰두한 나머지 자국 내에서의 실제적인 민주주의의 축진을 소홀히 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는 점이다(이동수 2008). 세계화라는 현상 속에서 국가들 간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있고, 또한 국제사회에서 주권을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존재하지만 국제사회에서 주권의 행사자로서 국가의 역할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 또한 세계화라는 현상 속에서 국민국가가 여전히 시민성의 소재지로 불변하고 있는 사실 또한 의문의 여지가 없다(Mouffe, Chantal 2000, 37).

이러한 비판적 시각은 세계시민사회 또는 세계시민성이 공허하다는 주장의 근거가 된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이 국제사회에서 국가들 간의 상호 의존성의 확대와 심화로 인해 야기되는 문제의 해결을 위한 국가들 간의 노력의 필요성을 부정할 수는 없다. 개별 민족 국가의 주권에 기반을 두면서도 민족주의로 인한 배타성을 최소화하면서 세계화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민주적 정치 공동체를 지향하는 새로운 시민성에 대한 모색을 얼마든지 가능하기 때문이다(변종현 2006, p.151).

것을 밝혔다.” 박웅희, 2007, “대안적 국제기구: 세계시민으로서 평화를 위한 이상적이고 가능한 체제에 대한 제안”, 『한국사회학회』 제8권 1호, 110쪽에서 재인용.

오늘날 한 개인은 국민국가의 일원인 국민으로서 동시에 세계화라는 현실 속에서 한 국가의 일원을 넘어 지구촌의 한 시민으로서 살아가고 있다. 바로 이러한 이중적인 상황 속에서 세계화라는 국제사회에서 시민성을 모색하는 것이 이 글의 목적이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 이 글은 세계화로 야기되는 문제의 해결을 위한 세계시민성을 사회자본이라는 개념 하에서 바라보면서 그것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한 국가의 시민으로서 그리고 동시에 세계의 시민으로서 개별 국가의 가치와 존재를 인정하면서 국제사회에서의 의식과 책임감을 갖는 시민성에 대해 고찰하고자 한다.

II. 시민성과 민주주의 그리고 사회적 자본

1. 시민성과 민주주의

바로, 천치라는 단어의 어원인 idiotes는 시민(citizen)의 반대어로 공적 영역에서 행동하려고 하지 않거나 할 능력이 없는, 순전히 개인 사에만 매달리는 인간형을 지칭하는 말이다(임경훈 2003, p.45). 이에 따르면 시민이라는 단어는 공동체에 관심사를 공유하고, 자유롭고 평등한 주체로 서로 관계를 맺으며, 공동의 문제를 함께 숙의하고 해결하는 사람들을 일컫는 말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어원적인 의미와 더불어 지난 시기의 역사는 이 시민이라는 단어가 민주주의의 확산, 심화와 밀접하게 연관된 것이라는 것을 말해준다. 즉, 고대 그리스에서 제한된 사회 집단에만 적용되었던 시민이라는 개념이 중세 봉건 사회와 절대 왕정 시대를 지나 현대로 오면서 모든 인간에게 보편적으로 적용된 역사적 변화를 그 속에 담고 있는 단어이다. 이는 시민이라는 단어에는 민주주의의 확산, 심화가 내포되어 있는 것이다.

고대 그리스에서 폴리스는 시민들이 정치 공동체의 공공 사안을

토론하고 결정하는 정치적 공간이었다. 이때 시민이라는 호칭은 단지 도시에 거주하는 사람이 아니라 도시나 국가의 통치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사람을 뜻했다. 시민 신분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은 토지 소유자와 전사(戰士)들로 귀족 계급에 제한되었다. 고대 그리스에서는 바로 이러한 시민들이 자유롭고 평등한 권리를 갖고 정치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데 함께 참여한 것이었다.

이러한 시민 개념은 이후 중세 시대를 거치면서 귀족주의적 사회 사상에 결부되어 시민적이라는 개념은 무례하고 문명화되지 못한 것과 대비하여 공손하고 세련된 사람과 행동을 의미했다. 이런 의미에서 시민적/비시민적 개념 구분은 문명화된/문명화되지 않은 구분과 무관하지 않다. 이러한 귀족주의적 시민 개념이 민주주의적 시민 개념으로 변화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바로 프랑스 대혁명이다. 1789년 ‘인간과 시민의 권리 선언’은 모든 개인이 시민으로서 법적, 정치적으로 평등함을 선포함으로써 전통 사회에서 전승되어 온 모든 특권을 폐지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나기 전 프랑스의 구체제는 신분을 세 가지로 구분하고 있었다. 제1신분은 성직자들로서 이들은 주로 사회의 도덕과 규범을 세우고 감시하며 처벌하는 역할을 했다. 제2신분은 귀족과 왕족으로서 왕정 운영과 평민을 대상으로 하는 행정을 관할했다. 이들 제1, 2신분은 당시 프랑스 총인구의 약 3-4퍼센트를 차지했다고 알려지며, 조세 의무를 갖지 않는 등 법적, 정치적 권리를 누렸다. 제3신분은 이들을 제외한 모든 사회 집단을 지칭하는데 농민, 노동자, 수공업자들과 부르주아를 모두 포함했다. 바로 ‘인간과 시민의 권리 선언’이 갖는 의미는 구체제 하에서 평등한 권리를 인정받지 못하고 억압당했던 이들 제3신분인 부르주아와 노동자, 농민들에게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선포한 데 있다고 할 수 있다.

고대 그리스에서 시민의 문화생활과 정치적 권리는 노예, 상인, 농민, 여성 등과 같은 피지배 집단의 정치적 배제를 전제로 한 것이었다. 그러나 프랑스 혁명의 ‘인간과 시민의 권리 선언’은 제한적인 시

민 개념을 모든 인간에게 보편화한 선언이다. 프랑스 혁명이 시민으로 규정한 사회 세력은 근대 사회의 새로운 지배 계급인 부르주아를 비롯해 이제까지 시민의 지위와 권리를 부여받지 못했던 노동자, 농민들을 포함했다. 다시 말해 프랑스 혁명은 인류 역사에서 시민으로 인정받지 못한 사회 집단을 시민으로 만들면서 시민 개념의 의미를 인간 일반으로 보편화했다.

그러나 자본주의의 발전과 함께 부르주아의 성장은 근대사회에서 구체제와는 다른 형식의 불평등 구조가 생겨났다. 자본주의의 발전으로 부르주아 계급은 농민 계급과 같은 전통적 하층 계급 또는 산업 프롤레타리아와 같이 새로이 부상하는 자본주의적 하층 계급과 대립하면서 하나의 사회적 집단 범주로 형성되어 갔다. 자본주의 사회의 구조적 불평등은 ‘인간과 시민의 권리 선언’에 나타난 시민으로서의 권리가 모두에게 평등하게 충족되지 않았다. 시민 계급이 주도하는 자본주의 시장 경제에서 인구의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임금 생활자들은 이 같은 시민적 삶을 향유하지 못했다. 이러한 구체제와 맞서 싸웠던 시민계급 내의 계급분화²⁾는 부르주아와 프롤레타리아 간의 계급 갈등의 형태로 나타나면서 시민담론의 약화를 초래하였다. 이러한 담론의 약화는 이후 냉전체제를 거치면서 더욱 심해졌다.

그러나 일련의 역사적 사건은 시민에 대한 현대적 재발견에 기여하였다. 먼저, 1970년대 중반부터 1980년대 말까지 세계 곳곳에서 계속된 정치 민주화의 물결이다. 사무엘 헌팅턴(SAmuel P. Huntington 1991)에 의해 제3의 물결이라고 명명된 남유럽 국가에서의 민주화 이

2) 조셉 폰타나 같은 학자들은 이러한 현상을 부르주아와 귀족의 일체화로 표현하고 있다. “귀족과 부르주아는 점차 일체화되어 갔다. 귀족들은 자신들의 특권을 재산으로 변형시키면서 부르주아화 했고, 부르주아는 귀족의 문화와 생활양식을 채용했다. 구체제의 완고함도, 부르주아의 승리도 없었다. 단지 지배 집단이 하층 계급의 열망으로부터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서로 협정을 맺지 않으면 안되게끔 만든 자본주의 논리만이 있었을 뿐이었다.” 조셉 폰타나 지음, 김원중 역, 2005, 『거울에 비친 유럽』, 서울: 새물결, p. 274.

후 1980년대 남미와 아시아 등에서 민주주의 체제가 들어섰다. 이 민주화 과정은 아래로부터 민중 운동에 의해 주도된 경우도 있었고 야당 세력이 지도력을 발휘한 경우도 있었으며 기존 지배 세력이 부분적으로 양보하면서 종결되는 경우도 있었다. 중요한 점은 이 모든 사례에서 시민 단체, 노동조합, 민주화 운동 조직 등 시민 사회의 연합된 힘이 민주화를 추동하는 가장 근원적인 동력이었다는 점이다. 두 번째는 선진 민주주의를 이룬 서구 사회에서도 지난 십여 년 동안 시민 담론이 매우 빠르게 부활하여 확산되었다. 시민사회의 활성화와 시민 참여가 민주주의를 더욱더 심화하고 발전시킬 것이라는 기대가 크게 작용했다. 즉 다수결 원리의 문제를 교정하고 정당 정치의 한계를 보완하며, 이익 집단 정치를 넘어 공공선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제도 정치만으로 충분하지 않으며, 문제의 당사자인 시민 자신이 정치의 한 주체로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는 문제의식이 짙은 것이다. 세 번째로 국가와 시장의 실패에 대한 대안으로 시민사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측면이 있다. 1930년대 세계공황의 경험으로 서구의 많은 나라들은 규제되지 않은 시장 경제의 파국을 방지하기 위해 경제 규제와 공공복지 지출을 꾸준히 증대했다. 그러나 1970년대 중반 이후 국가의 실패를 비판하는 시장 자유주의가 점차 득세하였다. 바로 1980년대에 등장한 레이거노믹스와 대처리즘이 대표적인 이데올로기이다. 또한 워싱턴컨센스(Washington Consensus) 하에서 국제 경제 기구들 역시 여러 나라에서 정부 축소와 공공 부문의 민영화, 기업에 대한 탈규제 등의 신자유주의적 정책들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탈 국가, 시장친화적인 신자유주의적 정책 역시 많은 문제들을 야기하면서 비판의 대상이 되었다. 이의 보완으로 시민 사회의 중요성이 강조되었고 비정부기구, 비영리기구 등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는 자발적 시민 결사체들에 대한 기대가 높아졌다.

고대 그리스 이후 프랑스 혁명을 거치면서 시민이라는 개념은 모든 인간을 뜻하는 보편적인 개념으로 사용되었다. 그러나 자본주의의 발전과 함께 이들 시민계급 내부의 계급분화는 시민이라는 담론을

약화시켰다. 그러나 민주화의 물결과 국가와 시장의 실패에 대한 대안적 담론으로 그 의미성을 갖고 있다. 이러한 역사적 사실이 의미하는 바는 바로 시민이라는 단어는 민주화 또는 민주주의와 직결된 개념으로 누가 시민인가에 대한 정의를 통해 발전되었으며, 90년대 이후 신자유주의 담론의 대안으로서 민주주의와 밀접한 연관성이 있는 개념이다.

2. 시민성과 공동체 그리고 사회자본

민주주의의 확산, 심화와 밀접한 연관성이 있는 시민이라는 개념은 국민이라는 말이 갖고 있는 수동적이고 부정적인 이미지를 넘어서 민주사회의 능동적이고 주체적인 구성원으로서의 함의를 갖는다는 것을 말한다(이동수 2008 p.7).

시민성의 이러한 함의는 인간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자신만의 이익추구를 자제하고, 공동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자발적 심리적인 상태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이러한 이유로 달(Dahl, Robert 1983, p.27)은 공공선에 대한 헌신 또는 관련 집단의 총체적 이익을 추구하는 자각적 의도를 시민적 덕성으로 정의하였다. 부르트(Burt, Shelley 1990, pp.35-36) 또한 사적 욕망에 반한 공적 목표에 우선성을 두는 성향을 시민적 덕성이라고 하였다. 시민성에 대한 이러한 정의는 시민성이 공동체 또는 공동선을 위해 자신의 이익을 희생하는 태도를 의미하는 것이다. 즉 시민성은 민주적인 시민이 되기 위한 기본적인 자질로 이웃들의 필요에 대한 공감의 능력이며 공동체적 목적의 실현을 위한 자발적 봉사로 정의될 수 있다(박승관 2000, p. 170).

시민성에 대한 이러한 정의는 공적영역과 시민성의 관계를 설명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아렌트(Arendt, Hannah 1958, pp.52-58)에게 있어 시민성은 공적영역에서 실현된다. 공적 영역은 그 내부에 다양하면서도 서로 얽혀있는 복합적인 공간으로서 인간들이 서로 보고, 듣

는 곳이다. 이처럼 인간들이 서로 보고 들으면서 더불어 하나가 되는 사회적 공간을 만드는 곳으로서 공적영역은 인간들 사이의 상호 존중과 합의의 창출 그리고 공동 이익의 증진을 지향함으로써 성립되는 소통적 인간관계의 장소이다.

민주사회의 능동적이고 주체적인 구성원으로서의 시민의 의미는 공동체와 관련한 논의와 더불어 적극적 참여에 대한 논의도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시민이 인간을 뜻하는 보편적인 의미로서 사용되기까지 지난 시기의 역사를 살펴보면 시민성 또는 시민권이 어느 자비로운 권력자에 의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적극적인 참여에 의해 시민에 속하는 사람들이 확대되었고 그 권한 또한 실체적 공간을 넓혀왔다. 이러한 역사적 사실에 근거해 마요(Mayo, Marjorie 2005, p.45)는 시민의 적극적 참여를 통해 구현되는 시민사회가 바로 시민권 발현의 보루이자 국가의 과도한 개입과 영향력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해주는 차양막이라고 보았다. 이는 결국 시민권, 시민성을 위한 시민사회의 활성화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다. 이러한 시민사회의 활성화와 관련해 퍼트남(Putnam, Robert)은 사회자본을 강조하였다. 퍼트남(Putnam, Robert 1983)에게 있어 사회자본은 협력된 행동을 촉진함으로써 사회의 효율을 개선시켜주는 신뢰, 규범, 네트워크와 같은 사회적 조직의 요소들로 민주주의의 정착과 제도적 수월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공동체의 문화와 사회적 신뢰의 형성이 가장 중요한 요소라는 점을 지적하였다. 퍼트남의 이러한 견해는 사회자본을 개인이 아닌 공동체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으로 공동체 내에 존재하는 시민들 간의 협력적 관계망이 사회자본으로 공동의 문제나 갈등들을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자원으로 기능한다는 것이다. 또한 퍼트남(Putnam, Robert 1995)에 따르면 개인들은 다른 시민들과 연결망을 형성하고 교류함으로써 시민적 태도의 핵심이 되는 호혜성, 관용, 연대감, 협동심 및 신뢰 등을 획득하게 되고, 이는 다시 연결망을 공고화함으로써 사회통합 및 경제발전, 민주주의의 활성화에 기초가 된다고 한다.

퍼트남 이외에도 사회자본에 대해 다양한 논의들이 이루어졌다. 후쿠야마(Fukuyama, Francis 1995)는 새로운 시장경제가 전지구적으로 확산되는 상황에서 가장 성공적인 국가는 자발적 결사체를 촉진시킬 수 있는 종교적, 문화적 기반을 갖추고 있으며 구성원들로 하여금 서로가 협동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적 자본을 갖춘 나라들이라고 주장하였다. 낡(Kanck, Stephen)과 키퍼(Keefer, Philip)는 사회적 자본의 축적이 많이 이루어질수록 국가들이 경제적으로 더 많은 상장을 한다고 주장하였다(Knack, Stephen and Philip Keefer, 1997). 또한 사회적 자본을 통해 시민사회와 사회운동이 활성화됨으로써 간접민주주의의 한계를 극복하고 실질적 민주주의에 접근하는 가장 중요한 자산이 될 것이라는 주장들이 제기되었다.

사회적 자본에 대한 이러한 논의들은 사회적 자본을 자발적 결사체를 창조하고 유지할 수 있는 능력, 즉 건강한 공동체를 유지하는 능력으로 정의하고 이것이 정치, 경제적 번영의 필수적 요소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다시 말해 사회적 자본은 집합행동의 딜레마를 풀어주며 사회구성원들이 이기심의 덫에 걸리지 않고 서로 협동할 수 있도록 해준다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민주사회의 능동적이고 주체적인 구성원으로서의 시민성은 바로 사회적 자본의 요소라 할 수 있다.

Ⅲ. 시민성과 속의민주주의

사회적 자본으로서 시민성은 능동적이고 주체적인 구성원들 간에 집합행동의 딜레마를 풀어주어 구성원들이 자신의 이기심이 아닌 공동체의 선을 우선시하는 심리적 준비 상태로 민주주의 심화, 확대에 있어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세계화라는 현실은 사회적 자본으로서의 시민성과 민주주의의 심화, 확대를 파괴하고 있다.

이미 1970년대 중반이후 남유럽을 중심으로 진행된 민주화, 그리고

1980년대 이후 남미와 아시아 그리고 1990년대 초 동유럽에서의 민주화는 민주주의의 세계적 확산 다시 말해 민주주의의 외연적 확산을 뜻한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경제의 세계화에서 그 본질적 특징을 찾을 수 있는 세계화는 민주주의의 심화와 관련해 의문의 여지가 있다.

세계화와 관련해 민주주의의 내포적 심화가 의미하는 것은 국내·외적 차원에서 주변화 되고 소외된 모든 계층 즉 노동자, 여성, (종교, 인종, 이념, 문화 등의 차원에서) 소수집단, 장애인, 노인 등의 정치적 평등은 물론 실질적인 사회경제적 평등이 확보되고, 나아가 민주주의의 실천이 단순히 정치적 영역에만 한정되지 않고 직장, 학교, 병원, 가족 등 일상의 삶에서 심화, 확산되는 것을 의미한다(강정인 2000, pp. 41-45). 이 내포적 심화의 핵심적 요소는 자유주의에서 평등적 요소가 강화되는 것, 곧 사회경제적 평등의 확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자유주의와 민주주의의 내포적 심화는 숙의 민주주의³⁾에서 찾을 수 있다. 숙의 민주주의는 공공 사안들에 관한 토론 과정에 시민들의 자유롭고 평등하고 열린 참여를 실현시킴으로써 민주주의의 수준을 진전시키려는 시도라 할 수 있다.

한나 아렌트(Hannah Arendt 1998)는 자신의 저서 『인간의 조건』에서 아테네의 고전적 민주주의 모형은 정치의 전개과정이 폭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말에 의해서 조종되어야 한다는 기본 철학을 바탕으로 성립되었다고 하였다. 이 견해에 따르면 민주주의는 이미 그 발원 단계에서부터 공적 사안들에 대해 인간들의 자유롭고 능동적인 토론에 의존하는 정치 체제라 할 수 있다.

쟁점 대상이 된 공공 의제에 관한 토론 과정에 공중의 자유롭고 평

3) "숙의 민주주의와 관련된 논의는 개인의 자율성을 중시하는 자유주의와 적극적인 정치 참여를 통한 공공선의 실천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체주의의 긴장을 해소하고자 하는 학문적인 노력, 자유롭고 평등한 시민들의 숙의를 통한 의사 결정이라는 민주주의적 이상을 실현시키고자 하는 제도적 모색, 그리고 차이의 인정을 넘어 다원성에 기초한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는 인식론적 전환까지 포괄한다." 곽준혁, 2005. "심의 민주주의와 비지배적 상호성" 『국가전략』 제11권 2호 p. 142.

등한 참여가 실현됨으로써 그들의 의사결정 과정은 질적으로 보다 성숙될 수 있다는 전제하에 공중은 숙의 과정을 통해 특정 사안에 광범위하고 다양한 대안적 관점들을 접하게 됨으로써 그들의 합리적 추론 능력을 능동적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그 결과 그들은 보다 정교화된 의견을 형성할 수 있게 된다고 본다. 결국 숙의 민주주의 개념에서 숙의는 인간의 공적이성을 활성화시키고 현실화시키는 실천적 과정이나 도구로 파악된다고 할 수 있다(데이비드 헬드 저, 박찬표 옮김. 2010. pp.437-484).

넓은 의미에서 숙의 민주주의란 자유롭고 평등한 시민들의 공적 숙의가 정당한 정치적 의사 결정이나 자치의 핵심 요소라고 생각하는 일군의 견해로 정의된다(Bophman, J, 1998, p.401). 숙의 민주주의 옹호론자들은 숙의가 개인적 견해의 한계를 극복하고 공적 의사 결정의 질을 제고할 수 있다고 본다. 이러한 주장의 근거는 먼저, 정보 공유 및 지식의 공동 이용을 통해서, 공적 숙의는 개인들이 이해한 바를 변화시키거나 복잡한 문제에 대한 그들의 이해력을 제고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둘째, 공적 숙의는 일정하게 형성된 선호들이 어떻게 분과적 이해관계와 연계되어 있고 그리하여 이데올로기적 목표를 갖고 있는가를 드러내 보여 줄 수 있다. 셋째, 공적 숙의는 이해관계의 언어를 이성의 언어로 바꿀 수 있다. 숙의는 집단적 판단을 향상시킬 수 있다. 왜냐하면 숙의는 정보의 공동 이용이나 견해의 교환에만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견해들에 대해 논리적으로 판단하고 주장들을 검증하는 데에도 관심을 기울이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숙의 민주주의자들은 민주적 생활의 질을 발전시키고 민주적 결과물을 강화하는데 목적이 있는 숙의적 요소를 포괄함으로써 민주적 절차와 제도의 정통성을 강화하고자 한다(데이비드 헬드 저, 박찬표 역 2010, pp. 450-451).

이상적 숙의의 조건에서는 좀 더 나은 주장 이외에는 어떤 힘도 행사되지 않는다고 하버마스가 강조하였듯이 숙의 민주주의 하에서 시민들은 공개적으로 자신의 선호를 정당화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채 단순히 선호를 표명할 수 없다. 결국 억압, 조종, 흥정에 의해 만들어진 결과물이 아니라 합리적 동기에 의한 합의이다. 숙의 민주주의는 정치적 정당화란 평등한 시민들 사이의 자유로운 숙의를 통해서 생긴다는 견해에 기초하고 있으며 이를 가능하도록 제도를 설치 조정해야 한다.

숙의 민주주의의 이러한 논의는 평등, 공개성과 강제의 부재 그리고 전원합의라고 하는 절차상의 가치들을 설정하고 지향한다고 할 수 있다. 토론과정에 있어 이러한 가치들은 모든 사람들이 동의할 수 있는 일반화될 수 있는 이익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토론의 결과가 정당하다는 것을 보증한다(상탈 무페 지음, 이행 역 2006, p.79).

그러나 숙의 민주주의의 가치들과 지향점에 대한 무페(Mouffe, Chantal)의 비판은 숙의 민주주의의 한계점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다. 즉 무페는 자유민주주의적 사회에서의 합의는 패권의 다른 표현으로 권력관계의 결정이며, 앞으로도 항상 그럴 것이라고 하였다. 정당한 것과 정당하지 않은 것 사이를 구분하는 것은 항상 정치적인 것이라고 주장한다(Ibid. p.80).

IV. 숙의민주주의에 대한 무페의 비판

숙의민주주의의자들은 정치적 결정에 대한 합리적 합의의 불가능성을 인정하지 않는다. 이들 숙의민주주의자들은 정치적 결정을 잠정적 협정이 아니라 평등한 사람들 사이의 자유로운 이성적 사유에 근거하는 동의의 도덕적 형태로 이해한다. 무페는 이러한 가능성과 관련해 숙의의 절차가 중립성, 평등, 개방성, 강제의 부재를 확보한 상황에서 모든 참가자들이 동의할 수 있는 일반화된 이익을 위한 숙의가 가능하고 정당한 결과를 만들어낼 것이라고 하였다(Ibid. p.139). 그러나 무페는 이러한 심의의 관련해 이상론 담론과 같은 합리주의적 도구들에 대한 장애는 결코 단순히 경험적이거나 인식론적인 것

이 아니라 존재론적인 것이라는 사실을 이해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실제에 있어 장애적인 요소로 제시되는 삶의 특정한 형태가 바로 공적 심의의 가능성의 조건이기 때문에 모든 공통의 관심사에 대한 자유롭고 무제한적인 공적 심의는 개념적으로 불가능한 것이라고 강조한다. 이러한 관점에 입각해 무페는 합리성과 중립성에 의해 지배되고 합리적인 보편적 합의가 도달되어질 수 있다는 소위 도덕적 관점이라고 일컬어지는 것에 특권적 지위를 부여하는 것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고 하였다(Ibid. pp.153-153).

무페는 또한 권력은 사회관계를 구성한다는 사실을 이해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하면서 숙의민주주의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즉 숙의적 접근법의 결함 중의 하나는 권력이 제거되고 합리적 합의가 실현될 수 있는 공적 영역이 가능하다는 것을 전제함으로써 민주적 정치에 대한 심의적 모델은 가치다원주의에 수반되는 적대의 차원과 그것이 결코 제거될 수 없다는 성격을 인식하지 못하는데 있다 (Ibid. p.153).

숙의민주주의는 기본적으로 자유주의와 민주주의에 기반을 한 것으로 양자를 동시에 추구하고자 하는 시도로 이해할 수 있다. 숙의민주주의의 이러한 특징은 무페가 상정하는 시민권과 관련해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 무페(Mouffe 1993, p.52)에 의하면 오늘날 자유민주주의 사회 하에서 시민 또는 시민권은 개인의 자유를 근간으로 하는 자유주의적 관점에 근거하고 있는 것으로 시민권을 단순히 개인들이 국가에 대항하여 견지할 수 있는 권리에서 출발하는 법적 지위에 관한 것으로 국한 시키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러한 논지에 따르면 자유주의적 관점에서 시민권이 행사되는 방식은 그것이 법을 위반하거나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한 개인에게 맡겨지며, 사회를 이를 방관할 뿐이다. 이런 자유주의적 시민들로 이루어진 사회에서는 개인과 개인의 권리에 대한 배타적 관심 때문에 개인들로 파편화된 사회가 된다. 이런 사회에서 시민들에게는 공적인 것에 대한 관심이 부재하며, 시민으로서의 어떤 공공 행위나 공동체에 대한 참여

는 기대하기 어려워 진다(이동수, ebd. p.9).

무페의 시민관은 이런 자유주의적 시민관에 대한 비판과 더불어 공동체주의적 시민관에 대한 동시적 비판에 근거하고 있다. 무페는 자유주의적 시민관의 문제점을 공동체주의자들은 공공선을 강조함으로써 해결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공동체주의적 입장은 근대 민주주의를 발명해 낸 자유주의의 근본적인 공헌을 인정하지 않는 문제점을 갖고 있다. 즉 근대 민주주의는 자유주의를 바탕으로 교회와 국가를 분리, 공과 사의 분리를 통해 개인의 자유에 대한 보장, 다원주의에 대한 보호, 시민사회의 발전과 같은 업적을 이루어냈으나 이러한 긍정적인 면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다는 것이다(Ibid. p.19).

무페는 이러한 관점을 기반으로 공공선과 개인의 자유가 양립가능하게 만들어야 된다고 믿는다. 무페는 자신의 이러한 시민에 대한 관점을 민주사회론 근거해 설명하고 있다. 이 민주사회란 자유와 평등을 정치적 원천으로 삼는 사회를 의미한다. 무페는 이 자유와 평등이라는 두 원칙의 긴장과 갈등관계에 주목하고 있다. 자유주의가 중요시하는 덕목으로서 자유와 민주주의가 강조하는 덕목으로서 평등은 서로 경쟁하고 갈등하는 가운데 민주사회를 발전시켜 왔다는 것이다.

무페에게 있어 자유와 평등이라는 가치는 서로 긴장을 이루면서 경쟁하고 타협하는 것으로 이 둘 사이의 근본적인 차이는 해소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상탈 무페 저, 이행 역 2006, p.19). 오히려 자유와 평등의 갈등을 해소하려는 것은 어느 한쪽을 제거하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으로 궁극적으로는 방중한 자유주의나 자유를 억압하는 사회주의로 귀결되고 마는 것이다. 무페가 주목하는 다른 또 하나의 자유와 평등의 관계는 서로가 공약 가능하거나 환원 가능한 것이 아니라 점이다. 즉 무페는 자유와 민주주의 대립을 일종의 테리다적 의미의 구성적 타자로 이해한다. 자유와 평등은 변증법적 부정에 의해 궁극적으로 종합되거나 극복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상대방이 구체적이며 포섭되지 않는 나의 타자로 존재함으로써 나의 존재성을 담지해 준다. 즉 자유는 자신과 배치되는 평등이 없으면 그 자체 존

립할 수 없으며, 민주 역시 자유가 없이 존재할 수 없다(Ibid. pp.27-29).

무페(Mouffe 1993, p.65)에게 있어 시민은 바로 자유와 평등의 이러한 원칙과 그것이 체현된 규칙들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시민권은 단순히 법적 지위와 연관된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 정체성을 갖는 형식과도 같은 것이다. 다시 말해 민주시민은 자유와 평등을 정치적 원칙으로 삼는 사회의 일원이 되는 것을 수락한 자를 지칭한다.

V. 시민성의 소재지로서 국가

무페에게 있어 자유와 평등의 관계는 아도르노(T. W. Adorno)가 말하는 부정변증법 즉 변증법적 과정 속에서 서로 경쟁하면서도 상대를 배제하지 않은 채 제3의 것으로 종합되지 않는 역동적 상태를 이루는 것으로 인식된다. 세계화 시기 시민은 바로 이러한 원칙과 그것이 체현된 규칙들의 권위를 인정하는 사람들이다.

이러한 시민의 이념과 제도가 오랜 역사를 거쳐 오면서 점점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점점 더 풍부한 권리를 부여하게 되었다는 것은 이미 언급하였다. 노예 소유주와 귀족에게만 해당하던 권리와 문화가 상인과 수공업자에게까지, 그리고 노동자와 농민에게까지 확대되어 왔다. 그러나 이러한 정치적 권리와 연대 정신은 오직 일정한 울타리, 경계 내에서만 해당된 것이었다.

그러나 고대 그리스시기 코스모스를 공동체로 하여 그에 속하는 모든 인류를 동료 시민으로 간주하는 세계시민주의는 세계 전체가 정치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이념을 표방하였다. 증기선과 증기 기관차의 발명으로 사람들은 짧은 시간에 원거리 지역으로 이동할 수 있게 되었다. 지리적으로 이동 범위의 급격한 확장, 원거리 무역과 산업 활동의 확대는 이방인에 대한 관심으로 연결되었다. 이 시기 독일과

프랑스의 계몽주의자들은 세계시민 개념에 역사적으로 새로운 의미를 부여했다. 이들에게 세계시민은 독일, 프랑스, 영국 등 한 국가, 한 국민의 행복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인간의 행복을 열망하고 촉진하려는 자이다. 세계시민주의자들은 이러한 보편 규범과 가치가 애국보다 우선해야 한다고 믿었다.

칸트는 이러한 세계시민주의에 입각하여 새로운 국제 질서를 구상하였다. 그는 모든 국가가 자기 이익만을 추구할 경우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으로 귀결될 것으로 보고 이러한 문제를 이성적으로 극복하여 평화 공존으로 나아가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칸트는 여러 국가로 나뉘어 있는 세계가 하나의 세계 공화국으로 통합되기는 어렵다고 보고 다양한 수준의 연맹과 연합을 제안했다. 여기에서 칸트는 세계시민권 개념을 발전시켰는데, 이것은 세계의 모든 시민이 어디에나 여행하고 체류할 수 있는 권리, 어디서나 적대적으로 대접받지 않을 권리, 지구에 대한 공동의 권리와 책임 등을 포함했다.

그러나 칸트의 이러한 세계시민권에 대한 논의가 시민성의 소재지로서 국가를 부인하는 논리로 발전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러한 문제점은 다음의 세 가지에 기인한다. 먼저, 여전히 자본주의하에서 실질적인 불평등 문제를 안고 있듯이 세계시민권의 이념 또한 국가 간의 엄청난 경제적 격차와 정치군사적 불평등 문제를 보완할 때에만 실질적인 내용과 성과를 가져올 수 있다. 즉 현실적으로 국제사회에서 주된 행위자들인 국가들의 행위를 결정하는 것은 자국의 이익 또는 생존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또한 자국의 이해를 위한 힘의 논리가 작용되어지고 있는 국제사회의 현실이 과연 민주주의적 질서와 부합할 수 있는지 의문시 된다. 4) 둘째, 세계시민의 의미와 논리에 몰두한 나머지 자국에서의 실제적인 민주주의의 촉진을 소홀히 할 우려가 있다. 셋째, 국제사회에서 각 국가들의 민주주의 발전의 정도

4) Waltz, Kenneth N., 1979, 『Theory of International Politics』, Boston: McGraw-Hill. Kindermann, Gottfried-Karl. 1977. 『Grundelemente der Weltpolitik. Eine Einfuehrung』, Muenchen: Piper.

는 상이하다. 이러한 상이성은 각국의 시민들 간에 자신들의 책임과 의무에 대한 문제로 연결되는 것이다. 이는 또한 시민성 함양을 위한 주체가 누가 되어야 하는 문제와도 연결되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들이 의미하는 바는 바로 세계화라는 현실 속에서 문제의 해결이 결코 일국적 차원에서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라 할지라도 시민성에 관한 소재는 결국 국가에 귀결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말한다.

VI. 연대의 시민성

시민성의 소재지로서 국가에 대한 논의가 국적 또는 다른 어떤 것을 기준으로 다른 인간을 나와 같은 동료시민으로 인정하지 않는 배타성을 의미해서는 안 된다. 세계화로 인한 문제의 해결은 결코 일국적 차원에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독일의 사회학자 라이너 졸(Rainer Zoll 2000))은 연대를 동등한 사람들 사이의 사회적 결합이라고 정의했다. 이 정의의 핵심은 바로 동등한, 사회적, 결합 이 세 단어에 있다. 졸에 의하면 연대는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가치, 권리, 권력의 평등을 인정하는 관계이다. 따라서 연대는 위계적이고 불평등한 관계와 구분된다. 또한 연대는 사회적 성격을 갖는다. 즉 개인들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공유하는 가치와 목표와 규범을 갖고 있다. 따라서 연대는 단지 개개인의 이해관계가 일치하기 때문에 모인 집단 이익의 추구하고 구분된다. 세 번째로 연대는 사람들 사이의 연합이다. 즉 공동체 의식, 동료의식을 갖고 서로 소통하고 함께 행동하는 집단이다. 그러므로 욕망을 공유하는 사람들끼리의 담합이나 일시적으로 집단 감정에 사로잡힌 군중 행동을 연대라고 부르지 않는다.

아렌트(Arendt 2008)에게 있어 권력은 사회적인 관계를 그 전제로 하면서, 어느 한 개인이 아닌 사람들이 서로 연합하여 공동의 목표를

위해 함께 행동할 때 생겨나는 것이다. 이러한 권력의 개념은 바로 문제해결을 위한 연대의 시민들 간의 연대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연대는 시민적 결사체라는 이념의 공간을 형성하는 것이다. 즉 독립적인 개인들이 자발적으로 결성한 연합체들이 두텁게 형성되어 있는 사회일수록 독재와 전체주의의 위험에서 멀어지고 다원적이고 민주적인 역동성을 발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시민적 결사체의 중요성과 의미와 관련해 알렉스 토크빌(Alex Tocqueville)은 『미국의 민주주의』에서 미국의 민주주의가 다수의 폭정으로 전락하지 않는 가장 중요한 기반을 바로 시민들의 자발적 결사체에서 찾고 있다. 세계정부가 없는 상황에서 바로 이러한 시민적 결사체는 문제 해결을 위한 공론의 장이며 또한 실천의 장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시민적 결사체는 결코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만병통치약이 될 수 없다. 시민 결사체가 어떤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고 이들이 어떤 가치관과 세계관을 갖고 있는지도 그 단체의 목표와 지향이 무엇인지에 따라 그것의 사회적 의미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 시민 결사체는 사회의 약자들을 보호하고 또 국제적 연대를 통해 전쟁과 환경 파괴를 예방하며, 정부의 권력 남용을 감시하고 억제하는 역할을 할 수도 있지만 반대로 자신들만의 결속을 강화하고 다른 이념, 다른 가치,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을 억압하고 배제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시민결사체 가운데 시민들의 자발성을 가장하여 돈과 권력을 추구하는 단체들도 있다. 특히 국가와 정치권력의 통제와 영향에서 독립적인 시민 사회가 아직 발달하지 못한 사회, 또는 시장 경제 제도가 아직까지 건강하게 자리 잡지 못한 사회에서 이러한 현상이 두드러진다. 일상의 깊은 영역까지 국가 권력이 통제하려 들거나 경제활동으로 환원될 수 없는 모든 삶의 영역들이 기업의 이윤 논리에 잠식된다면 겉모양은 시민들의 자발적인 모임인 듯 보이지만 실제로는 정권의 하수인이나 돈벌이 수단인 경우가 많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는 시민 단체가 지산이 지지하는 정권의 건강한 동반자 역할을 하

는 것과 분명히 구분되며, 또한 기업의 이윤 논리로 해결하지 못하는 경제적 필요를 시민들의 힘으로 충족하는 것과는 분명히 다르다.

아프리카와 러시아, 동유럽 등지에서는 이러한 시민적 결사체들을 지칭하는 말이 유행하기도 한다. BONGO(Business-oriented NGO), GONGO(Governmental NGO), MONGO(Mafia-organized NGO)등이 그러한 예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사례들이 시민 결사체의 긍정적인 잠재력을 부정하는 것으로 연결되어서는 안 된다. 세계화 시대 문제의 해결을 위한 연대의 기본 단위로서 시민 결사체들이 민주공화국의 헌법 정신을 지지하고 있는지, 시민 사회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있는지, 모든 시민의 동등한 존엄성과 기본권을 존중하는지, 정치권력이나 기업 권력에서 독립적인지 등을 기준으로 판단을 해야 할 것이다.

VII. 나아가며

시민이라는 단어는 사회적이고 정치적이며 역사적인 개념으로 이 단어에는 지난 수십 년, 수백 년, 심지어 수천 년에 걸쳐 수많은 사람들에 의한 민주주의의 확산과 심화라는 삶과 체험이 녹아있다. 즉 일부의 사람에게만 제한적으로 사용되던 시민이라는 단어는 민주주의의 확산과 심화와 함께 오늘날 우리에게는 너무나 낯익은 단어가 되었다.

세계화라는 현실은 우리에게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적인 협력의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세계시민사회의 필요성을 제시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시민성은 여전히 국민국가에 존재하고 있다. 이러한 필요성과 현실성 속에서 과연 세계화시기에 알맞은 시민성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이에 이 글에서는 무폐에게 있어 시민의 관점이 세계화시기에 의미가 있다고 보았다. 자유는 자신과 배치되는 평등이 없으면 그 자체

존립할 수 없으며, 평등 역시 자유가 없이 존재할 수 없는 구성적 타자로 이해하고 이러한 원칙과 그것이 체현된 규칙들의 권위를 인정하는 사람을 시민이라고 말하는 무폐의 논의는 세계화시기 시민이 갖추어야 할 내용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이 시민이라는 단어는 민주주의와는 별개의 것으로 존립할 수 없는 것으로 세계화와 관련해 민주주의의 내포적 심화가 의미하는 것은 국내·외적 차원에서 주변화 되고 소외된 모든 계층 즉 노동자, 여성, (종교, 인종, 이념, 문화 등의 차원에서) 소수집단, 장애인, 노인 등의 정치적 평등은 물론 실질적인 사회경제적 평등이 확보되고, 나아가 민주주의의 실천이 단순히 정치적 영역에만 한정되지 않고 직장, 학교, 병원, 가족 등 일상의 삶에서 심화, 확산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 내포적 심화의 핵심적 요소는 현행 자유민주주의에서 평등적 요소가 강화되는 것, 곧 (정치적 평등의 전제조건인) 사회경제적 평등의 확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국제사회에서 이러한 것의 기본 단위는 국가이다. 이는 바로 세계화시기에 일국적 차원에서 문제의 해결을 할 수 없으나 시민성은 계속해서 국가에 존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세계정부가 없는 상황에서 시민성 함양의 주체가 바로 국가라는 사실 그리고 일국적 차원에서 민주주의의 심화를 위해서는 시민성이 계속해서 국가에 존재할 수밖에 없다.

시민성이 국가에 소재한다는 사실이 세계시민사회의 부정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시민 결사체의 국제적 연대가 바로 세계시민사회를 의미한다고 하겠다. 그러나 이 시민 결사체를 만병통치약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시민 결사체가 연대를 통한 문제해결을 위한 단위로서 기능할 수 있을지는 먼저 이들이 민주공화국의 헌법 정신을 지지하고 있는지, 시민 사회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있는지, 모든 시민의 동등한 존엄성과 기본권을 존중하는지, 정치권력이나 기업 권력에서 독립적인지 등을 기준으로 판단을 해야 할 것이다.

< 참 고 문 헌 >

- 강정인, 2000, “세계화와 세계시민 민주주의: 이론적 모색”, 『유럽연구』 여름 통권 제1호, pp. 39-65.
- 곽준혁, 2005, “심의 민주주의와 비지배적 상호성”, 『국가전략』 제11권 2호, pp. 141-168.
- 데이비드 헬드 지음, 박찬표 옮김, 2010, 『민주주의의 모델들』, 서울: 후마니타스.
- 박웅희, 2007, “대안적 국제기구: 세계시민으로서 평화를 위한 이상적이고 가능한 체제에 대한 제안”, 『한국사회학회』 제8권 1호, pp. 103-118.
- 변종현, 2006, “세계시민성 관념과 지구적 시민성의 가능성”, 윤리교육연구 제10집. pp. 139-161.
- 상탈 무페 지음, 이행 역. 2006. 민주주의의 역설. 인간사랑.
- 조셉 폰타나 지음, 김원중 역, 2005, 『거울에 비친 유럽』, 서울: 새물결.
- 이동수, 2008, “지구화 시대 시민과 시민권: 무페의 논의를 중심으로”, 『한국정치학회보』 제42집 2호, pp. 5-22.
- 임경훈, 2003, “대의민주주의 원리와 대안”, 김세균, 백창재, 임경훈 편, 『현대 정치의 이해』, 고양시: 인간사랑, pp. 43-76.
- Arendt, Hannah, 1998, 『The Human Condition』,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Second Edition.
- _____, 2008, Macht und Gewalt. Muenchen: Piper. 18. Auflage.
- Bophman, J., 1998, "The Coming of Age of Deliberative Democracy." Journal of Political Philosophy, Vol. 6. Issue 4. pp.400-425.
- Burt, Shelley,, "The Good Citizen's Psyche: On the Psychology of Civic Virtue," *Politiy*, Vol. 23. No. 1. pp.23-38.

- Dahl, Robert A., 1983, *Dilemmas of Pluralist Democracy: Autonomy vs. Control*.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 Held, David, 1992, "Democracy: From City-States to a Cosmopolitan Order?" *Political Studies*, Special Issue, pp. 10-39.
- _____, 1995, 『Democracy and the Global Order』, London: Polity Press.
- Huntington, P. Samuel, 1991, 『The Third Wave: Democratization in the Late Twentieth Century』, University of Oklahoma Press.
- John, Rawlas, 1999, 『The Law of People,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 Kindermann, Gottfried-Karl, 1977, 『Grundelemente der Weltpolitik. Eine Einfuehrung』, Muenchen: Piper
- Mouffe, Chantal, 1993, 『The Return of the Political』, London: Verso.
- Waltz, Kenneth N., 1979, 『Theory of International Politics』, Boston: McGraw-Hill.
- Zoll, Rainer, 2000, 『Was ist Solidarität heute?』 Frakkurt am Main: Suhrkamp Verlag.

Globalization, Social Capital , and Citizenship

Kim, Kyung-rae
(Honam University)

Abstract

Globalization following the end of the Cold War has deepened interdependence among nations. This interdependence leads to increased international cooperation among states to solve problems caused by globalization. Despite the globalization trend, national states still exist as the locus of citizenship. However, critics of globalization deny the necessity for joint effort among nations to solve the problems caused by globalization. We, as members of the nation-state and as citizens of the global village, should seek a democratic political community at the international level. For this reason, this article stresses the importance of solidarity among citizens, both at the nation-state and international levels.

Keywords : Citizenship, Globalization,, global citizenship, citizenship of solidarity, Chantal Mouffe